

역사학과 기록학

학문의 인연, 학제의 괴리

History and Archives: Colleagues or Strangers?

오항녕(OH, Hang-Nyeong)*

1. 머리말
2. 불안 : 국사와 해석의 질곡
3. 인연 : 학문의 전통과 개념
4. 기로 : 학제의 변화와 재편
5. 맺음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hallimoh@hanmail.net).

■ 투고일 : 2017년 10월 10일 ■ 최초심사일 : 2017년 10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10월 19일

〈초록〉

필자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역사학의 재정의(再定義)를 통해 재직하고 있는 역사학과의 개혁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역사-기록, 역사학-기록학, 역사학과-기록학과의 오랜 인연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현존 역사학이 기록학으로부터, 기록학이 역사학으로부터 서로 지원과 동력을 받지 못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1장에서는 두 학문이 멀어지게 된 이유 가운데 현존 (한)국사학계의 문제점을 먼저 다루었다. ‘국민국가사’ 중심의 역사학과 커리큘럼은 국민의 기억을 특권화함으로써, 개인, 가족, 사회, 단체, 시민, 지역으로서의 기억을 배제한다. 이는 다양한 역사 차원을 가진 인간의 현존재에 부응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역사학계에 팽배한 ‘역사는 해석’이라는 편견은 역사학을 사실이 아닌 관념적 구성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경험주의로부터 역사학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국민국가사 중심으로 연구될 경우 다양한 차원의 아카이브는 고려되지 않고, 해석을 강조하며 사실에서 멀어지는 한 기록은 부수적이 된다.

동아시아 역사학의 전통과 역사의 개념에서는 두 학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사(史)는 역사와 기록, 둘 다 의미하였다. 진본에 대한 고민은 젠킨슨이나 듀란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자기록과 함께, 또는 2006년 공공기록법과 함께 시작된 개념은 더구나 아니다. 역사학과 기록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즉 문서-기록-사료, 직서/곡필-진본성, 편찬-평가-감식, 편찬-정리, 해제-기술 등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기표(記表, signifiant)가 다르더라도 그 개념 및 의미 내용인 기의(記意, signifié)는 같았다.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provenance’, ‘original order’라는 기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전래의 기록관리 교육과 실무에서도 유지되었다.

3장에서는 현존하는 역사학과 기록학 사이의 학문적 전문성과 보편성의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역사학계의 측면에서는 기록의 생산-전달-활용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과 기록학과화(化)를, 기록학계의 측면에서는 전문성의 핵심인 평가와 기술 부문에서 기존 역사학의 성과를 충분히 수렴할 것을 제안하였다.

역사학은 탈-기록학을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다행이다. 반면 기록학은 탈-역사학을 시도하는 듯하다. 어리석다. 역사학이 기록학의 손을 놓으면

토대가 흔들리고, 기록학이 역사학의 손을 뿌리치면 뿌리를 잃는다. 더구나 동지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앞에는 불길한 조짐과 새로운 가능성, 둘 다 놓여있다.

주제어 : 역사, 기록, 평가, 기술, 정리, 해제, 편찬, 역사학, 기록학, 사료, 문서, 국민국가사, 커리큘럼

〈Abstract〉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history, my colleagues and I have reformed our department in terms of curriculum and faculty members. This paper is a report of some of the conclusions that we have obtained from this procedure. Despite a long relationship, two disciplines do not seem to match or complement each other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We believe tha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has focused on “national history (NH).” By conferring a privilege on NH, persons, families, societies, regions, and others were removed from NH. To make matters worse, a biased view that history is just an interpretation has prevailed, and the empiricism of history was weakened, which brought about an indifference in keeping records and archives.

In East Asia, “history” means both modern history and archives. The concern about the authenticity of records did not come from H. Jenkinson or L. Duranti, and not even from the electronic environment or the Public Records Act of 1998. Key concepts such as records, documents-archives, manuscripts, authenticity, compilation-appraisal, arrangement, and description are different from their signifiant but are same or similar to their *signifié*. In case of “provenance” and “original order,” they are used in education and practice in the traditional archives.

History includes the recording, archiving, and the story or historiography of an event. In this context, th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hould contain a more archives-oriented curriculum and select an archival-trained faculty. On the other hand, the department has accumulated long-term experience with appraisal and description of records; thus, archival science should absorb the criticism of the material.

History will be shaken without the help of archives, while archives will lose their root without history. We are at the point in which we need to be reminded why we want to be a historian or an archivist, and for this, the more colleagues, the better.

Keywords : history, record, archives, appraisal, description, arrangement, compilation, national history, curriculum

그는 지독해 보일 정도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중시한다.
특정한 해석이 지배하는 역사학보다는
‘사실’에 대한 충실한 고증을 바탕으로 둔 기록학이
역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병권(2014)

1. 머리말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광주민주화운동의 한복판이었던 1980년 5월 21일의 사건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바바라 피터슨의 목격, 수원비행장 조종사, 훈련비행사의 출격 대기 명령에 대한 증언이 그것이다. 동시에 그렇지 않다는 작전사령관의 반론도 있다(Jtbc 뉴스룸, 2017년 8월 21일, 22일, 23일, 24일

보도). 11공수여단 상황일지에는 이 날의 발포가 ‘폭도들의 발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판결을 통해 밝혀진 이 기록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계엄군의 발포를 왜곡한 것이었다(대법원 판결문 96노1892). 추후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계엄군이 육군과 공군 합동으로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여 공격하려 했던 정황이 처음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명령하였다. 이렇게 현대사의 한 장면이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박용필 2017).

이렇게 증언과 기록은 드러나지 않았거나 감추어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기록학은 바로 그 증언과 기록을 인류가 도달한 최선의 문화적, 기술적 조건에서 생산-관리-보존-활용하는 임무의 이론과 실천을 탐구한다.

지난 10년 국가 차원의 공공부문에서 기록관리가 난맥상을 보여왔고, 기록학계는 문제제기를 통한 저항의 한켠에서 학문적 실무적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대학, 마을 아카이브 등 민간 영역에서의 확대가 긍정적 요소라고 한다면,¹⁾ 역시 공공부문의 지체 또는 후퇴,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현실은 부정적 요소였다고 하겠다. 필자 역시 나름대로 난세를 건디는 방안의 하나로 재직하고 있는 학과의 개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역사학과 기록(archives)의 문제를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본고는 거기서 얻은 관찰과 고민의 자취이다. 역사-기록/역사학-기록학/역사학과-기록학과의 관계와 역할, 그리고 의미 있는 협력을 위한 나름의 의견이다.

길지 않은 기록학계의 역정 초기에 이미 “역사학과 기록보존의 상호의존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아키비스트와 역사학자가 전문적인 직업적 통찰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논고들이 제출된 바 있다(이상민

1) 기록학계가 자기 몫을 하는 주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재적이자 상징적인 징표는 ‘세월호 기억저장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본능적 대처였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록자로서의 문제의식이 성숙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http://www.416memory.org/>>

2002; 전명혁 2005). 이 논문은 연구에 기록을 이용한다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역사연구와 기록의 관계를 다루었고, 아키비스트의 기록 선별과 가치 평가를 다루었다. 이어 기록학이 지니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측면을 관리-보존-사료인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사료인식이 역사학의 사료학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한 연구도 제출되었다(김익한 2004). 아울러 기록관리론에서 말하는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집합적 기술의 원칙은 사료구조론과 조응한다고 적시하였다.

필자 역시 역사학 일반의 측면에서 기록이 갖는 의미를 저서로 제출한 바 있다(오향녕 2010a). 이외에도 본고의 주제와 같은 ‘역사학과 기록’, 또는 ‘역사학과 기록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룬 논문이 더 나와 있는데, 그 논지에 대해서는 본문의 논의가 진행될 때 다루도록 하겠다.

본고의 목적은 현존 역사학이 기록학으로부터, 기록학이 역사학으로부터 어떤 지원과 동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역사학과 기록학이 상호 다른 차원의 후원을 할 수 있는 시너지의 가능성을 ‘현존’ 학계에서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담겨 있다. 이 문제는 분과학문체제에 갇혀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나, 당연한 말이지만, 교육부에서 내놓는 ‘연구사업’을 따기 위해 급조되는 ‘융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

1장에서는 현존 (한)국사학계 자체를, 교과과정과 역사학적 주제를 통해 점검해보겠다. 2장에서는 기록, 편찬, 진본성 등 두 학문의 공통된 개념을 통해 역사학과 기록학의 학문적 혈연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1장과 2장의 논의를 토대로 두 학문이 현실 학계에서 보여주는 괴리 양상을 살펴보고, 거기서 그 괴리의 극복 가능성, 학문적 전문성과 보편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는 전반적인 학계 현황에 기초하여 서술하느니만큼 세세한 차이까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보학, 행정학 등 기록학의 베이스가 되거나 협력관계에 있는 여타 학문들도 상호 후원, 지원의 가능성을 탐

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분과학과 사이에 놓은 담장은 교수의 직위 유지에는 어쩔지 몰라도 학문의 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불안 : 국사와 해석의 질곡

한국에서 역사학과는 서양사학과/동양사학과/(한)국사학과로 나누어져 있거나 ‘사학과’로 존재한다. 중등교육의 역사과목은 (한)국사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사든 한국에 대한 역사든 역사=국사로 생각하도록 배운다. 다음은 어느 학교 대학 커리큘럼이다.

- 언어 및 방법 : 한국사한문강독/한국사세미나/한국사특강/한국사 논문쓰기
- 시대사 : 한국고대사/한국중세사/한국근세사/한국근대사/한국현대사/한국독립운동사
- 분야사 : 한국사학사/한국과학기술사/한국상공업사/한국근세사상사/한국사회경제사/한국대외관계사/한국고대사상사/한국사와 멀티미디어²⁾

‘(한)국사학과’ 커리큘럼이니까 그렇다 볼 수도 있다. 하긴 우리나라에 (한)국사학과 말고 또 무슨 학과가 있는가. 사학과라고 하든,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라고 하든, 위의 커리큘럼에 ‘한국’이란 글자만 빼고 다 같다. 쉽게 말해 현재 한국 역사학과는 역사교육 커리큘럼을 ‘국민국가사(國民國家史)’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³⁾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과과정. <http://koreanhistory.snu.ac.kr>, (n.d.)

3) ‘국민국가사’는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만들어진 ‘국사’였고, 그 역사는 계몽주의의 진보를 구현하는 대문자 역사였다(우카이 사토시 1999), 대문자 역사와 진보사관은 태생이 같다. 이에 대해서는, 오향녕(1994; 2007a)의 연구 참조.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록학개설, 박물관학개설 등 기초분야의 강의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어, 역사학계에서 학부과정에서부터 기록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 또한 서양근대주의 문화관에 대한 반성을 교과목의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영화나 드라마 등 역사와 역사 재현의 문제, 규장각 등 기록관의 역할을 다루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양상도 관찰된다.⁵⁾

하지만 여전히 국민국가사 중심의 한국사가 주류인 만큼 이런 상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전국 거의 모든 대학의 역사학과(국사학과)는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식민지 및 현대사로 되어 있다. 서양사와 동양사 역시 국민국가사, 또는 국민국가사를 모아놓은 지역사(예를 들면 유럽사, 남미사)를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나 규모의 차이, 이런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스테레오 타입의 교과가 국민국가답게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전공 교수가 퇴임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는 그 전공만 뽑는다. (한)국사학과는 학생, 시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지위와 영역을 위해 유지되는 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국사’ 교육 체제는 그대로 유지, 온존된다.

익히 알다시피 19세기 유럽 국민국가의 완성에 충실히 시너 노릇을 했던 역사학은 국민국가의 탄생과 유지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방해가 되는 기억은 지워버렸다. 예를 들어, 제주(탐라)나 바르셀로나, 오키나와에 대한 기억은 대한민국이나 스페인,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빨리 지워버리고, 국사가 보여주는 기억으로 대체해야 했던 것이다.

사람은 여러 차원의 역사를 만들며 살아간다. 가족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학교에 다니면 학교의 역사를 구성한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4)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과과정. 검색일자: 2017. 8. 24. <http://koreahistory.korea.ac.kr/koreahistory>.

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양교과. 검색일자: 2017. 8. 24. <http://koreanhistory.snu.ac.kr>.

나 절의 역사를 만들고, 또 자연스럽게 자기 고장의 역사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국사는 가족사에 대해 봉건적이라는 굴레를 씌워 봉쇄하는데, 족보는 여러 역사의 일부이지, 타도 대상이 아니다. 그 외에 학교나 사회단체, 지역 등 사람들이 곳곳에서 만들어가는 역사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육’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간혹 뜻있는 역사 선생님을 만나 동아리 활동으로나마 접하는 행운을 기다려야 한다.

‘역사-인간’의 몸은 일곱 색깔 무지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물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여지겠는가? 수능 시험, 공무원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뿐이다. 그러니 재미없다.⁶⁾ 그나마 공무원 시험도, 경상도나 충청도 공무원을 뽑는데 국사를 시험 보는 것은 타당성이 적다. 그 지역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하니 경상도사(史)나 충청도사를 절반 정도는 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현실은 또 다른 반동적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바로 2016년 국정교과서 책동이다.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그나마 여러 교과서를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나아진 한국사교과서 검정 제도를 군사독재시대로 되돌려, 반공, 군부독재 정당화 논리를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 세뇌’시키려는 것이었다. 애당초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유신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기관이었으니, 이러한 사태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오향녕 2015a; 오향녕 2015b; 김한중 2015). 흔히 ‘교학사교과서’라고 불리는, 1000군데가 넘는 오류로 인해 불량 교과서의 오명을 쓴 국사교과서를 2013년에 만들었다가 채택률 1% 미만이라는 수모를 당하자, 아예 정권을 이용해서 국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정권이 바뀔으로써 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은 저지되었다. 그러나 국민국가사의 동일성(同一

6) 재미가 없다는 것은 삶에 닿아있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학교는 침체한다(오향녕 2014).

性) 회귀 본능이 남아 있는 한 국정화의 가능성은 항상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책동은 역사학계에 끝나지 않은 숙제를 던져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학계는 이 숙제를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화 저지는 시민, 역사교사,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낳은 결과이지만, 그동안 현대사 연구가 쌓인 결과이기도 하다. 즉 이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다. 광복 전후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국부(國父)’라거나 ‘민족중흥의 영웅’으로 추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역사학계의 90% 이상이 이승만-박정희를 축으로 한국 현대사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성명서를 냈던 것이다. 이를 부정할 논거가 없자, 총리까지 나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자를 좌파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싸움이 아니라 조폭-싸움으로 몰고 갔다. 진실을 숨기는 데는 패싸움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패싸움에 역사학이 말려드는 양상이 있었다. 역사학에서 사실과 해석의 관계를 오해하여 ‘역사는 해석’이라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오항녕 2016a).⁷⁾ 다음을 보자.

정확한 학문에는 약속이 있다. 해석도 그런 기본 논리 위에서 해야 한다. 역사에서 말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술된 팩트다. 1961년에 몇몇 군인이 한강을 건넜다는 것은 팩트다. 그러나 그건 역사가 안 된다. 그들이 한강을 건너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해석해야 비로소 역사다(『한국일보』(인터넷판), 김용욱 교수 인터뷰, 2015년 11월 16일).

7) 기록학계에서도 ‘아키비스트의 관점, 가치개입’을 강조하며, 과거=사실이 주조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조민지의 질문이 그러한데, 그는 “아키비스트도 전적으로 중립적인가? 오히려 에디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문한 뒤, “더구나 기록의 기술 표준은 그 자체로 확일적이고 효과적인 조직화를 보장하지만, 그리고 일정한 기준을 통한 업무 처리는 분명히 그 설명책임성을 잘 보장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주관성과 영향력을 은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현재의 도구로 과거를 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조민지 2011, 105-106).

평소 개념적 엄밀성과 정확성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는 김용옥의 언명이다. 인용문은 국정교과서 시도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의 말에서 사실과 해석의 이분법을 읽는다. ‘사실만으로는 역사가 안 된다’, ‘해석해야 비로소 역사다’라는 언명을 이분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필자는 1961년에 군인들이 한강을 건넌 것도 역사가 되고, 그걸 쿠데타라고 판단하는 것도 역사가 된다고 본다. 아니 역사학의 출발은 앞의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1961년에 몇몇 군인들이 한강(漢江)을 건너지 않았으면 아예 쿠데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학의 경우, 사실은 해석의 기초를 이루지만, 해석은 사실이 없으면 애당초 성립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의 오류, 본말 혼동의 오류, 역사학을 불구로 만드는 오류가 최근 국정교과서 찬반 논의에서 의외로 많이 발견되었다.

2011년 10월 28일, 서울 서대문 4.19혁명기념도서관 강당에서, “보수와 진보가 보는 민주주의-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론, 헌법, 역사”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 국정교과서화 초기단계였다. 발제를 맡은 박명림(연세대)의 발표에, “임시정부 이래 이승만 정부까지 어떤 헌법, 연설, 인터뷰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없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었다.

토론을 맡았던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역사학에서 사료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해석이다. 이는 역사학의 기본이다. 그런데 박교수는 사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말대로, “역사학에서 사료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해석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사학은 사료가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더 역사학의 기본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가진 김용옥과 권희영의 언명이 이토록 똑같다는 사실이?

여기서, 사실과 해석의 문제와 더불어, 역사학의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한

또 다른 주제가 나타난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할 때 역사관의 다양성이 반대 논거로 제시되었다. 타당한 점이 있다. 다양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진화론(進化論)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학적 비판이라면 다양성이 아니라 사실 사이의 연관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는 논거가 지닌 사실과 사실 연관에 대한 비판이 역사학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다양성이란 다시 해석이나 관점의 문제일 텐데, 그러면 ‘정치적 견해, 입장’이 우월하게 작동하고 정작 역사학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오랜 연구를 쌓은 역사학의 권위자에게서도 발견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역사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재도입되고, 근현대사 과목이 분리되면서 나온 게 금성사 교과서다. 내가 수구보수는 분명 아닌데, 나같이 온건한 사람이 보더라도 지나치게 좌편향이었다.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쪽에서 너무 나갔다. 그렇게 나온 게 교학사 교과서 아닌가. 여기나 저기나 균형 감각을 잃은 건 같다. 이런 서술에서 무슨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위기의식에서 책을 펴냈다(『경향신문』(인터넷판), 한영우 교수 인터뷰, 2016년 2월 2일).

한영우는 마치 국정교과서 논의가 우파와 좌파의 관점 문제인 듯 설명하고 있다. 역사는 균형감각 이전에 사실의 문제이다. 만일 균형감각으로 접근하면 역사 안에 존재하는 많은 것을 놓친다. 정의와 불의, 슬픔과 기쁨, 안타까움, 평범함 등을 가늠할 수 있을까? 아픈 건 아픈 것이다. 아픈 것과 안 아픈 것 사이의 균형감각이 있을 수 있을까? 균형감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도, 예민한 경우에는 그 균형감각은 누가, 무엇이 보장하느냐는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다시 끝없는 균형감각이 넘치는 판단=해석들만 주장될 것이다. 이러다보면 출구는 초월자가 되는 것이다. 전지적(全知的) 역사학자 시점에 서는 것은 필연이다. 역사학자가 줄지에 ‘좌우 어느 곳에도 치우치

지 않는 운운'하는 초월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⁸⁾

거듭,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주장했던 '북침을 주장하는 좌파 교과서'는 검정 한국사교과서 중에 없었다. 국정화를 책동한 자들은 사실의 문제를 해석, 관점의 문제로 바꿔치기 했고, 해석과 관점은 사실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역사학자들조차 사실과 해석의 문제를 혼동하면서, 역사는 해석의 학문인 듯 말려들었다. 이것이 한국 역사학계의 수준이자 실력의 맨얼굴이기도 하지만 어설프게 역사를 고민할 때 나타나는 병증의 하나이다.⁹⁾ 물론 이런 병증은 기록학과 깊이 제휴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⁰⁾

3. 인연 : 학문의 전통과 개념

그런 인식이 일면적이고 부정확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 관심 → 연구 → 해석, 이렇게 역사 연구를 진행된다. 당연히 역(逆)의 과정도 있다. 해석 → 관심 → 연구 → 사실의 과정이다. 이렇게 사실과 해석은 늘 긴장한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증거 삼아, 기억 삼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기록류를 저장기억이라고 부르고, 교과서나 논문에 남아 있거나 내 머릿속에 지금 탁 떠오르는 또는 그렇게 떠올리는 기억을 기능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Assman 1999).

저장기억은 비활성화되어 있고, 비교적 무념무상하게 불러줄 때를 기다

8) E. H. 카이는, 그의 연구업적과 역사대중화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주관과 객관의 문제를 혼동하여 역사학도들을 헷갈리게 한 장본인이다(Carr 1997). 카이의 혼동에 대한 비판은 오항녕(2016, 149-158) 참고.

9) 하긴, 역사학을 해석의 학문으로 보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학자 리처드 에번스는 책 한 권을 쓰기도 했다(Evans 1997).

10) 역사-기억과 보존기록-기억을 구분하는 논의의 대부분은 이런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Jimerson 2009, 4장).

리고 있다. 필자는 어떤 매체나 방식을 통해서든 경험을 적어서 남기는 기록행위[Documentation, Recording]와 그 기록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역사서술[Story, Historiography]을 구분한 적이 있는데(오항녕 2016b; Ricoer 1983),¹¹⁾ 아스만의 용어를 여기에 대입하면 기록행위=저장기억, 역사서술=기능기억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대체로 근대 역사학 분과에서는 후자를 역사학이나 역사-소비 일반의 결과물이고, 전자는 기록학, 기록관리학의 대상이자 결과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사(史)는 기록행위와 역사서술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였다. 이렇게 역사라는 개념 자체도 시공(時空)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기록, 고문서(古文書), 사료(史料) 등 각기 다르게 부를지라도 ‘아카이브’가 역사학의 바탕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¹²⁾ 기록 일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경험을 잡아두고 영속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실 역사의식에는 종교성(宗教性)이 담겨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진작부터 ‘있는 대로 기록하고 지어내지 않는다(述而不作)’는 명제나 사료 비판(史料批判, Quellenskunde)이라는 용어(Hartman 2004)가 역사학에 동반되어 왔다(『논어(論語)』 「술이(述而)」). 이러한 상호관계의 자명성(自明性)과 더불어, 기록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몇 가지 역사학의 경험과 실천이 기록학의 근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진본성(眞本性, Authenticity), 출처주의(出處主義, Provenance), 원질서(原秩序) 존중, 정리(整理, Arrangement), 기술(記述, Description), 평가(Appraisal) 등 기록학의 중추 개념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자기록이 일반화된 현재, 기록의 성격(품질, 자격)을 결정짓는 4대 요소가 강조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 4대 요소는 진본성, 무결성(無

11) 역사가 이야기라는 말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보편적 답변이기도 하다.

12) 규장각과 장서각을 ‘archive’라고 부를 뿐 아니라, 고문헌관리학과와 고문서와 기록 모두 ‘archives’라고 부른다. 검색일자: 2017. 8. 25. <http://www.aks.ac.kr/univ/>, 인문학부 고문헌관리학.

缺性, Integrity), 신뢰성(信賴性, Reliability), 이용가능성(Usability)이다.¹³⁾ 이 용가능성은 전자기록의 속성상 2바이트 기호를 읽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에서 유래한 속성이므로, 비교적 근대의 개념이지만, 나머지 세 속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료비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다.

이 중 진본성은 ‘기록의 물리적 특징, 구조, 내용과 맥락 등을 포함하여, 내적 외적 증거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기록의 품질로서, 어떤 기록이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이며, 훼손된 바 없는 상태인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한국기록학회 2008, 237).¹⁴⁾ 즉, 진(眞)－위(僞)를 가르는 기준이 진본성이 된다. 쉽게 말해 ‘이’ 『태종실록(太宗實錄)』이 조선 실록청에서 편찬한 것이 맞고, ‘저’ 『난중일기(亂中日記)』가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쓴 일기가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편지의 수결(手決), 전교(傳敎)에 찍힌 어보(御寶) 등은 진본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무결성은 그 실록이나 일기가 훼손, 변조, 손상되지 않고 기록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진본성이 생산자와 관계된 개념이라면, 무결성은 생산 이후의 관리, 보존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¹⁵⁾ 이를테면 사초(史草)를 훔치거나, 도려내거나, 누설하거나(비밀일 경우), 지우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¹⁶⁾ 일기(日記)가 전사(傳寫)되면서 수정, 변경되는 것

13) 4대 요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14) 듀란티는 진본성을 법적, 고문서학적, 역사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본고의 논의에서 보면 천착(穿鑿)이라고 생각한다(Duranti 1998, 45-58). 역사학에서 보면 ‘authentic’은 ‘genuine’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15) 진본성과 무결성은 떼어 생각하기 어렵고, 무결성을 진본성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견해도 있다. 듀란티가 그러하다. 듀란티, 앞의 책. 그에 따르면, 진본성이란, 그 기록이 만들어진 이래 어떤 조작이나, 대체, 왜곡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또한 진본성은 기록의 내재적 성격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 예를 들어 절이나 공공시설, 창고, 기록관 등에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기록에 부여된 성격인 것이다. 그의 진본성 개념은 보존 단계를 포함하며, 이런 전제에서는 무결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첫째, 생산과 보존의 주체가 달라져왔던 역사적 경험이나, 둘째, 기록의 생애를 고려할 때, 진본성과 무결성이 구분되지 못할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경험에 대한 논의는 오향녕(2009)를 참고.

에 대한 검증¹⁷⁾ 역시 무결성이란 주제에 해당한다. 전자기록에서는 접근 제어 기능이나 로그인 흔적을 남기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무결성을 유지할 것이다.

신뢰성은 해당 기록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말한다. 속종조 갑술양전(甲戌量田)의 전결(田結)을 기록한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의 내용이 믿을 수 있는지, 2017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를 기록한 문서의 통계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를 묻는 것이다.¹⁸⁾

이렇듯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은 사료비판이라는 이름 아래 역사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맞닥뜨리는 주제이며, 훈련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어쩌면 사료를 다루는 역사학자들은 이 요소와 하루종일 아니 평생 씨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유지기(劉知幾)는 역사 편찬에서 사료 수집의 적절성(採纂), 인습의 오류와 병폐(因習), 직서의 전통과 모범(直書), 곡필의 사례와 영욕(曲筆) 등을 서술하여(유지기 710)¹⁹⁾ 역사기록의 진위, 왜곡, 신뢰라는 핵심 주제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 편찬의 경험은 역사학 뿐 아니라 기록학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단서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실록(實錄)에 대해 학계에서는 대개 ‘역

16) 『세종실록』권123 31년 3월 임오조(2일), “春秋館啓. 本館所藏史草, 皆記君臣善惡, 垂示後世, 關係至重, 非他文書之非, 禁防不可不嚴. 若史官惡其自己干係之事, 或諱親戚舊故之請, 思欲滅迹, 全盜卷綜者, 以盜制書律論斬. 截取磨擦墨抹者, 以棄毀制書律斬. 同僚官知而不告者, 依律減一等. 將史草事情, 漏泄外人者, 以近侍官員漏泄機密重事於人律斬. 上項事件, 雖經赦宥, 正犯人, 奪告身, 永不敘用. 犯者物故, 亦行追奪, 知而不告及漏泄者, 只收職牒, 以嚴防禁. 從之.”

17)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도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일기 역시 원본에 글씨를 겹쳐 쓰거나, 먹줄로 삭제하거나, 아예 일기 전체를 후손이 다시 옮겨 쓰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이성임 2014).

18) 그러니까 신뢰성이란 해당 기록이 증거로써 갖는 권위와 진실성을 가리키며, 그 문서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신뢰성은 문서가 ‘초안(草案, drafts)’이든, ‘원본(originals)’이든, ‘사본(寫本, copies)’이든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Duranti 1995).

19) 각각 내편(內篇) 15장, 18장, 24장, 25장이다. 『사통』은 ‘역사학개론’이지만, 동아시아 전통의 사(史)는 근대 역사학과 기록학을 합한 것이다.

사서'라고 하기도 하고, 편찬을 거쳤기 때문에 2차 사료라고 하는 등 개념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런 애매한 태도에서는 마찬가지였다(오향녕 2008a). 이런 '현대 역사학'의 '전통시대 역사학'에 대한 모호한 이해는 기록학 개념을 대입하면 비교적 명료히 설명할 수 있다.

의정부(議政府)나 사헌부(司憲府) 등 각 관청 업무에서 활용이 끝난 문서는 폐기되거나 보존된다. 조선시대 사관(史官)의 사초(史草)도 그러하였다. 사관의 사초는 실록 편찬이 끝나면 세초(洗草)하고 그 종이는 재생하여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사초의 운명은 애당초 '사라지게 되어 있는 = 폐기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종종 '영구보존기록(archives)'을 사초에 비유하는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영구보존기록'은 바로 '실록'이라고 보는 것이 개념적으로 타당하다. 실록 편찬과정에서 보면, 사초는 '평가(appraisal)'를 거쳐 폐기되고 살아남은 사초는 실록에 '등록(騰錄, 登錄, registering)'되는 것이다. 이를 조선시대에는 편찬(編纂)이라고 불렀다.²⁰⁾

바로 이러한 '평가'와 '등록' 때문에 '직서(直書)'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직서'는 진본성과 신뢰성 개념과 관련이 있고, 이는 역사학에서는 오래된 '1차 사료', '2차 사료'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²¹⁾ 전통적으로 역사기록의 생명처럼 중시된 '직서'라는 말에는, 첫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는 의미²²⁾와, 둘째, 그 기록을 변조, 훼손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20) 편찬이라는 용어는 오해가 많은 용어인데, 등록, 평가 외에 기록학의 정리(整理, Arrangement)도 포함한다.

21) 실은 그리 오래된 구분은 아니다. 19세기 말의 일이다(Bernheim 1907).

22) 흔히 인용되는 동호(董狐)와 남사(南史)는 의 직필의 상징으로, 각각 춘추 시대 진(晉) 나라, 제(齊)나라의 사관이었다. 남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대로 썼다(據實直書)"라는 평을 받았고, 동호는 "서법은 숨기는 일이 없었다(書法不隱)"라는 평을 들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25년, 선공(宣公) 2년.

기록학의 ‘관할권의 승계와 지속(chain of Custody)’ 개념에 비추어도 이러한 성격은 증명될 수 있다(Jenkinson 1937). 앞서 말했듯이 사초는 원래 ‘산삭(刪削, Appraisal)’을 거쳐 실록이 되든지 세초가 되든지 하도록 작성된 기록류였다. 그리고 그것은 공적 권위를 가진 관원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그 문서를 생산하였거나 법적으로 규정에 따라 그 문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즉 관할권(Custodianship)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기록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실록으로 편찬된다고 하여 전혀 원본의 가치를 해치는 것은 아니었다.

실록을 ‘신사(信史)’, 즉 ‘믿을 수 있는 역사’라고 부른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하여 실록의 영어 대역어를 ‘Veritable Records’라고 하였는지도 모르겠으나(Lee 1993, 530), 필자는 ‘Authentic Records’라는 대역어가 기록학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실록은 ‘기록(영구보존기록, Archives)’인 것이다(오향녕 2008b).²³⁾

이어 기록학에서 말하는 정리(整理, Arrangement)의 원칙인 출처주의(出處主義, Provenance)와 원질서(original order) 존중의 문제를 살펴보자. 앞서 편찬은 등록과 평가-선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는데, 편찬은 정리의 의미도 포함하는 중층적 의미의 용어였다. ‘시정기(時政記)’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정기는 사관이 실록을 편찬하기 전에 사초와 타 관청 문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요즘 법제로 치면 기록관의 문서정리에 해당한다. 일종의 파일링(filing)인데, 이 역시 ‘시정기 편찬’이라고 불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전교축(傳敎軸) 역시 등록(謄

23) 그 근거를 정리하면, 첫째, 실록의 ‘찬수법례’에서 확인된다. 14개 조항(정조실록 편찬부터는 27개 조항)은 실록이 산삭을 거친 문서의 등록임을 보여준다. 둘째, 실록 편찬의 프로세스, 즉, 활용-수집/이관-산삭(평가)-등록-보존이라는 근대 기록학의 ‘라이프 사이클’ 개념과 일치한다. 셋째, 실록에 수록된 사평이나 줄기 등 ‘조사, 연구’를 거친 기록들도 사관에게 부여된 공적 활동의 소산인 ‘공문서’라는 점에서 ‘문서’로서의 실록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조선후기 네 차례에 걸친 실록 수정(개수)에서 추론할 수 있는 실록의 성격이다(오향녕 2010b).

錄)의 하나였고 이 축(軸)을 만드는 파일링 과정 또한 편찬이라고 불렀다(명경일 2014).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²⁴⁾은 현재도 고문서의 교육과 실제 정리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사학계의 고문서학을 개척한 최승희는 애당초 출처주의에 입각한 고문서학개론이자 입문서를 학계에 제출한 바 있는데(최승희 1981), 그는 문서의 발급자를 중심으로 강(綱)을 삼고, 발급자별로 수급자를 목(目)으로 삼아 분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테면, 국왕발급 문서에 왕실(王室), 관부(官府), 사인(私人), 서원(書院) 등 수급자를 배치한 것이다. 비록 시안(試案)이라고 했지만, 기실 공문서의 성격으로 미루어 가장 자연스러운 분류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각사등록(各司謄錄)’이라는 명칭으로 간행된 각 도(道)의 문서, 승정원일기, 의금부등록(義禁府謄錄), 충훈부등록(忠勳府謄錄) 등 모든 문서는 출처주의에 입각하여 간행되고 있다.²⁵⁾

뿐만 아니라, 장서각(<http://jsg.aks.ac.kr/>), 국학진흥원 등 고문서를 수집, 관리하는 주요 기관들도 가문(家門)이나 개인에게 기증받은 문서의 원질서를 지켜 보존하고 있다. 장서각은 고문서의 형태, 제목, 가문별 분류를 이미지로 제공하지만, 서가(書架)의 관리와 보존은 출처인 가문별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www.koreastudy.or.kr/) 역시 자료 유형, 주제, 연도, 지역별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가와 기본분류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다.²⁶⁾

이렇듯 문서(records, documents)－기록(archives, manuscripts)－사료(史),

24) 이들 원칙의 적용은 기록의 실제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 자체를 변용하지는 않는다. 정의(正義)의 관점에서 원칙의 적용을 논한 글로는 이경래(2015)를 참고.

25) 아키비스트의 다른 전문영역과 마찬가지로, 기록학계의 출처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이라는 점에서 허전하다’. 외국의 논의가 비교적 충실히 소개되고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제기는 이루지지만, 정작 한국 기록관리의 경험에서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설문원 2017).

26) 한국국학진흥원, www.koreastudy.or.kr/,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직서(直書)/곡필(曲筆)－진본성(Authenticity), 편찬(編纂)－평가(appraisal)－감식(鑑識), 편찬－정리(Arrangement), 해제(解題)－기술(記述)²⁷⁾ 등 지역과 시대에 따라 기표(記表, signifiant)가 다르더라도 그 개념 및 의미 내용인 기의(記意, signifié)는 같음을 알 수 있다.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provenance’, ‘original order’라는 기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²⁸⁾ 즉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교육과 실무에서도 거의 차이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4. 기로 : 학과의 변화와 재편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공통 베이스와 오랜 인연에도 불구하고, 몇몇 긍정적인 소통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 다른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그 현상을 살펴보고 불필요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단절을 폐기할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존 학과와 상관없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Homo Historicus]’에 주목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과 흔적을 만들고,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사(史)의 영역을 〈표 1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오향녕 2016b).

27) 규장각, 장서각, 국학진흥원 등에서 문헌을 이용자에게 소개하는 해제는 기록학의 기술(記述)과 같다. 그런데 기록학의 핵심 영역인 기술이 현재 대학원과 실무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결핍은 사안이 중대하므로 4장에서 따로 다루었다.

28) 조선에서는 출처주의에 해당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아마 ‘출처’라는 말을 쓸 이유가 그들의 기록관리 경험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출처’란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록이 ‘출처 아닌’ ‘방식이나 장소 또는 ‘논리’로의 변화를 겪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 근대에 이 문제가 떠오른 것은 봉건사회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변화되는 제도 일반의 변화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

〈표 1〉 사(史)의 영역

범주	흔적	전달	이야기
주체	나	나/자손	자손
	공무원	기록관/박물관/도서관	영화감독
	학생	캐비닛	역사학자
	과학자	번역자	분야사가
	언론	...	기업
	...		...
산출	일기/편지	컴퓨터 파일	평전/자서전
	학급 일지	족보	드라마/영화
	숙제	전시	교과서
	사진/동영상	또는 폐기	논문
	공문	교사(校史)	게임
	신문	번역	

편의상 왼쪽부터 1범주, 2범주, 3범주, 이렇게 부르자. 위 표의 위치에서 보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전체 역사 중 일부분이다. 대학의 전공 과정에서 읽고 쓰는 ‘논문’ 역시 전체 역사 중 일부분이다. 흔적－전달－이야기하기라는 각각의 범주마다, 주체, 산출이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주체는 ‘인간 모두’가 정답일 것이다.

이런 ‘역사－인간’의 실재와 달리 현존 (한)국사학과의 커리큘럼이 주로 국민국가사로 국한되어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런 학계의 현실과는 달리 위와 같이 흔적(발굴과 생산)－전달－이야기의 구조와, 국민국가사를 지양하고 지역사, 인생사로 교과과정을 확대한 사례도 있다.²⁹⁾

• 공통 : 인문학기초 I, II, 한국사입문, 호남지역사입문, 역사학개론

29)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콘텐츠학과 2017년 교과과정

- 국사 : 한국고대사, 한국중근세사, 서양현대사, 동아시아사근대사, 한국사상사, 역사교육론, 역사교과교재 및 연구법, 역사교과교육론
- 흔적 : 고고학탐구, 고고학조사와 발굴실습, 문화재조사방법 및 실습, 인간과 다큐먼트, 호남고문헌탐구, 역사지리와 공간
- 전달 : 박물관과 문화유산, 지역사료강독, 역사와 아카이브, 구술 및 생애사조사기술론 * 번역³⁰⁾
- 이야기 : 역사문화콘텐츠입문, 디베이트 역사해석, 역사와 문화소비, 문화유산과 전시콘텐츠, 문화콘텐츠인프라탐사, 역사와 치유, 역사콘텐츠구출과활용, 역사논술지도법

위 교과과정은 한국사입문과 함께 호남지역사입문을 공통과목을 설정하여, 국민국가사와 지역사를 대등한 위치로 바꾸어놓았고, 생애사를 도입하여 기존 한국사 체계에 균열을 가져왔다. 한국사에서 역사(史)로 학과의 대상을 전환한 것이다. 이를 기록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국민국가사’ 중심의 (한)국사학과를 ‘기록’ 중심의 역사학과로 재편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을 붙잡아두는 유력한 수단인 기록의 위치나 생애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 영역을 온존시킨 것은 ‘역사과 교직(敎職) 과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생들의 장래 취업을 위해 한국사시험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직과목 변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사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나서서 주관할 정도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획일성이 국정교과서 파동과 관계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국가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이 실험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교과과정이 역사학이란 학문이 ‘역사-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국민국가사’ 중심의 (한)국사학과보다 더 촉진하고 심화하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렵든 쉽든, 생소하든 익숙하든, 인간의 삶과 더 닿

30) 역사를 전달하는 유력한 영역 중 하나인 번역은 온지당(溫知堂), 한국고전번역원 등과 학점 교류 제도를 통하여 학생을 위탁, 교육하는 방식을 취한다.

아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관광이나 문화를 상품과 동일시하여 역사학 역시 그들 상품과 묶어 처리하는 개악이 버젓이 자행되는 대학 현실에서, 역사학이 인간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토대로 마련된 교과라는 점에서 자본이나 시장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생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한)국사학과와는 달리 기록학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다. 그러나 기록학 대학원이 생겨 박사학위 소지자가 다수 배출되었음에도 전임교수가 확보된 대학이 손꼽을 정도라는 것은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이 등록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교육과정 내에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 그것은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기술(Description)의 문제이다.

기술이 없으면 기록의 구조와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국제 기술표준인 ISAD(G)는 26개 기술항목을 제시하여 기록의 계층에 따른 구조와 맥락 정보, 내용을 설명하도록 권하고 있다.³¹⁾ 26개 기술항목은 식별(참고코드, 제목, 날짜, 기술계층, 기술 단위), 맥락(생산자, 행정이력, 기록관리이력, 수집 및 이관 자원), 내용과 구조(범위와 내용, 평가 및 폐기 일정 정보, 추가기록, 정리체계), 활용(접근 조건, 재생산조건, 언어, 물리적 특성, 검색도구), 관련 정보(원본 위치, 사본 위치, 관련 기술 단위), 주기(註記), 기술통제(기록관리자 노트, 법령, 기술날짜) 등 7개 영역에 배분되어 있다. 아키비스트가 이 작업을 해주어야 기록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록을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원하는 만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역사학, 문헌학에서는 ‘기술’이라는 말 대신 ‘해제(解題)’라는 말을

31) 상식적인 말이지만, 26개 항목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26개 항목은 인천대교처럼 안전하게 건너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규격화가 아니라, 혹시 해당되는데 빠트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주는 안전망이다. ISAD(G)의 항목화를 규격화로 오해하는 글은 이영남(2014)를 참고.

더 많이 써왔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반역 사건 등에 관련된 죄인을 신문하던 추국청(推鞠廳)에 대한 기록을 해제한 경우이다. 각각의 해제 항목에 ISAD(G)의 영역과 항목 번호를 매겨보았다.

서명(3.1.1) 推鞠日記 현대어서명 추국일기

저자(3.2.1) 承政院(朝鮮) 編

청구기호(3.1.1) 奎12795-v.1-30

책수(3.1.5) 30冊

간행년대(3.1.4) [17世紀 中半－19世紀 末(仁祖24年－高宗19年: 1646-1882)]

판본(3.4.3) 筆寫本(正本)

사이즈(3.4.4) 37.6×27.8cm(大小不同)

본문(3.2/3.3) 1646년(仁祖 24)부터 1882년(高宗 19)까지 惡逆罪人에 대한 推鞠의 내용을 요약한 책이다. 본래의 重罪人에 대한 供招記錄으로는 본 규장각소장의 《推案及鞫案》[奎15149]이 있으며 본 일기는 이 《推案及鞫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補充하는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時代의 重罪人으로서 國王의 特旨에 따라 推鞠을 받는 부류는 變亂·逆謀·黨爭·邪學·凶疏·掛書·假稱御使·陵上放火 등이 지목되는데 다시 이들은 내용의 輕重에 따라 親鞠·庭鞠·推鞠·三省推鞠으로 구분되어 推罪訊問을 받게 되어 있었다.(후략)³²⁾

* 열람신청, 복제신청³³⁾

32) 규장각, 추안급국안. 검색일자: 2017. 8. 25. <http://kyujanggak.snu.ac.kr>. '역사는 해석이다' 류의 일면적 관찰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에 아키비스트가 개입함으로써 왜곡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조민지 2011). 그러나 위의 해제에서 보다시피, 해제=기술에서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오히려 필자가 보기에 우려되는 것은 기록관리자가 해제=기술을 작성할 능력이 있느냐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총독부문서를 재직 중인 아키비스트가 해제하지 않고, 외부의 '기록학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타당한지, 손쉬운 성과를 위해 정리-기술에 토대를 두지 않은 '콘텐츠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일이다.

33) 열람, 복제는 ISAD(G)의 3.4 접근 및 이용 영역에 해당되는데, 위의 규장각 인터페이스에서는 해제 항목에 들어 있지 않고, 화면에 따로 클릭하도록 되어 있다.

이 해제에서 책이라고 표현했지만 ‘추국일기’는 문서를 책 모양으로 정리한, 당시 표현으로 ‘성책(成冊)’하였을 뿐, 아카이브에 해당한다. 필자는 위의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바람직하거나 모범적인 해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추국일기가 사본(寫本)인지 여부, 생산자를 승정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들 죄인에 관한 기록은 승정원의 형방(刑房)에서 관장’한다는 서술의 타당성 등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ISAD(G)의 기술 요소를 학습한 상태에서 해제를 작성했다면 훨씬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해제=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층별 기술 개념이 없다. 대개 어떤 반역사건, 예를 들어 임해군(臨海君)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연루된 죄인들의 진술이 각각의 문건(item)이 될 것이고, 어떤 죄인의 여러 진술들, 즉 문건들이 파일을 구성할 것이며, 그 파일들이 임해군 사건이라는 시리즈를 구성할 것이다. 기록군(record group)은 통상 추국청이 될 것이다. 기록학의 세련된 방법에 따르면, 추국청-임해군사건-하대겸(河大謙, 연루된 임해군 처조카)-1차진술서의 계층에 따라 기술=해제를 하는 것이 권장될 것이나, 위의 해제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제가 ISAD(G)가 나오던 1999년 전에 작성된 것인지, 후에 작성된 것인지는 모르지만,³⁴⁾ ISAD(G)의 기술 요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ISAD(G)의 영역과 요소의 넘버에 따라 표시한 바대로, 위의 해제는 기술의 여러 영역과 요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실무는 물론, 기록학 대학원 교육에서 해제=기술에 대한 훈련이 외면당하는 것은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에 심각한 위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1998년 전후, 기록전문가의 자격을 석사졸업자로 했던 것은 기록에 대한 분석, 조사, 연구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였다. 이러한 기록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평가와 기술 영역에서

34) 도서관 서지정보 작성을 원용했을 것이다. 아직 도서관과 기록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 기록학이 간여하지 못했을 때의 일이다.

빛을 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한 축이 불안한 것이다.³⁵⁾ 기록학 대학원에서 규장각, 장서각의 해제를 ISAD(G)와 함께 학습, 실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속히 실무에서도 기술(記述) 영역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해제=기술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굳이 아키비스트가 대학원을, 아니 대학조차도 졸업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5. 맺음말

중국 송나라 학자 주희(朱熹) 평전(評傳)을 쓴 미우라 쿠니오(三浦國雄)는 주희 집안의 돌림자가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행(五行)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이 처음 발견했다고 좋아했다고 한다(미우라 쿠니오 1979). 그러다가 전 14책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이라는 명작을 남긴 모로하시 테즈지(諸橋轍次)가 이미 그 사실을 서술해놓은 것을 보고 ‘창견(創見)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현대, 이는 주희 당대 사람들은 물론 조선 시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이 에피소드는 진본성을 강조하는 기록학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본에 대한 고민은 젠킨슨이나 듀란티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전자기록과 함께, 또는 2006년 공공기록법과 함께 시작된 개념은 더구나 아니다. 이미 2천 년 이상 된 사학(史學)의 주제였고, 그에 대한 이론과 방법이 역사학개론에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취지에서 진본성, 평가, 정리,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 기술 등의 주요 기록학 개념을 역사-인간의 이론과 실천에서 살펴보았다.

35) 『기록학연구』에 평가와 기술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건강한 징후이나, 외국 이론의 소개나, 이론적 탐색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 적용되는 논문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별 평가 영역도 교육과 실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한다(최재희 2011).

사회가 복잡해지면 전문 영역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분업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전문화와 분업이 소외(疎外)를 촉진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잠실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면, 포워드와 골키퍼의 역할은 다르고 그들의 기술 또한 그 역할에 맞게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지만, 상대편과 우리편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멋진 축구경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기록학과 (한)국사학과는 그런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불투명한 미래가 종사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무겁게 만드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과(학문이 아니라)가 친하지 못한 듯한 느낌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필자의 생각을 확신하게 만드는 가까운 이유가 있었다. 근래에 ‘역사-인간’에게 초미의 쟁점이 되었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과, 박근혜의 탄핵에 따른 대통령 기록 이관 논란 및 과거 사건과 관련된 역사학계와 기록학계의 대응이다.

국정교과서 책동은 (한)국사학계의 핵심 쟁점이었고, 박근혜 정권은 내내 총력전을 펴다시피 추진과정에서 온갖 협잡, 은폐, 왜곡을 일삼았다. 그들은 교육부 자신이 검정한 교과서를 부정하는 자기모순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기억을 뒤틀었고 정보는 차단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학계는 성명서마저도 인색하였다.³⁶⁾ 얼마나 완벽한 분업인가? 이러다가 기록학 전공자들은 이라크 국립박물관을 미군이 폭격했을 때 발표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ICA를 비웃을지 모른다. ‘기록관도 아닌데 왜?’ 하고 되물으면서.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2008년의 참여정부 기록관련 비서진의 고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부당한 공개, 2017년 황교안 대통

36) 희망적인 것은, 2015년 10월 26일, “역사와 기록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가가 기억을 독점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기록학회의 성명서가 있다는 점이다.

령 권한대행의 불법적인 대통령기록물 지정, 청와대 캐비닛에 버리고 간 대통령기록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쌓아놓은 기록문화를 폐기하다시피 방치하고 무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학계는 성명서, 기자회견 등 분주하였으나, 역사학계는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포에 대한 한국역사연구회의 성명서가 그나마 위안이 될 뿐이다.³⁷⁾ 아무래도 기록은 역사학의 전문 영역이 아니었나보다. 이러다가 규장각에 변고가 생겨도 고려시대 전공자들은 나 몰라라 할지 모른다. 어차피 고려시대 기록은 규장각에 없으니까.

쑥스러워서일 수도 불안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학과는 불안한 가운데 희망봉을 돌고 있는데, 기록학과의 항공모함이 될 수 있는 오랜 유산과 가능성을 마다하고 굳이 (한)국사학과가 걸어갔던 왜소화의 길을 택할 이유는 없다. 역사학이 기록학의 손을 놓으면 토대가 흔들리고, 기록학이 역사학의 손을 뿌리치면 뿌리를 잃는다. 더구나 동지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앞에는 불길한 조짐과 새로운 가능성, 둘 다 놓여있다.

‘사실을 해석에 동원’하는 역사주의에 맞서
 ‘해석에 저항하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데
 기록학의 힘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해석에 맞서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병권. 2014. 『철학자와 하녀』. 메치미디어.
 광견홍. 2009. 노동 아카이브(Labor Archives)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77-114.

37) 한국역사연구회, “전국의 역사학자들이 국민께 드리는 글”, 2013년 7월 4일. 고문서학회 역시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

- 곽건홍. 2010. 노동청 기록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141-178.
- 곽건홍. 2011. 기록관 체제 재검토. 『기록학연구』, 27, 3-33.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김덕목. 2012. 민속과 기록의 만남, '민속기록학'을 제창한다. 『기록학연구』, 34, 165-219.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 김영, 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 밀양765kW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01-151.
- 김익한. 2004.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기록기술. 『기록학연구』, 10, 3-26.
- 김익한. 2004. 학제간 협동연구로서의 기록학의 과제. 『기록학연구』, 9, 193-209.
- 김정하. 2009.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1, 3-40.
- 김진성. 2011.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 89-123.
- 김한중. 2015. 『역사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 책과함께.
- 노명환. 2006.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제도의 정립: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 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14, 359-388.
- 류한조, 이희숙. 2010. 재현 중심의 기록학-담기, 관리하기, 보기. 『기록학연구』, 24, 3-40.
- 명경일. 2014. 정조대 전교축(傳敎軸)을 통해 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문서 등록(謄錄) 체계. 『고문서연구』, 44, 77-116.
- 미우라 쿠니오(三浦國雄). 1979. 『朱子』. (이승연, 김영식 옮김. 1996. 『인간주자』. 창비).
- 박용일. 2017. 8. 24. '5·18헬기사격' 증언과 기록으로 보는 진실. 『경향신문』.
- 박지영. 2016. 차세대 기록물 기술표준에 관한 연구 : ICA EGAD의 Record In Context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223-245.
- 박지영. 2017. ISAD(G)에서 RiC-CM으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93-115.
- 설문원. 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3-43.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 287-326.
- 설문원. 2017. 기록관리 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 분석-출처주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60-119.
- 손동유. 2011.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8, 155-180.

- 신동희, 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 안병우. 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44, 217-241.
- 오항녕. 1994. 통일시대 역사인식을 찾아서.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하. 통나무.
- 오항녕. 2001. 실록(實錄): 등록(謄錄)의 위계(位階). 『기록학연구』, 3, 15-40.
- 오항녕. 2007a. 『조선초기 성리학과 역사학』.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오항녕. 2007b. 역사교육의 새로운 지평, ‘아카이브’. 『역사교육』, 101, 297-327.
- 오항녕. 2008a. 조선전기 기록관리체계의 이해. 『기록학연구』, 17, 3-37.
- 오항녕. 2008b. An archival interpretation of the Veritable Records. *Comma*, 2008(2), 183-189.
- 오항녕. 2009. 『韓國史官制度成立史』. 일지사.
- 오항녕. 2010a. 『기록한다는 것』. 너머학교.
- 오항녕. 2010b. 당대사 실록을 둘러싼 긴장, 규율, 그리고 지평. 『역사학보』, 205, 1-35.
- 오항녕. 2014. 『밀양 인디언－역사가 말할 때』. 너머박스.
- 오항녕. 2015a. 독재 권력의 역사 기억 통제. 『역사와 현실』, 96, 37-50.
- 오항녕. 2015b. 그을린 민족문화: 전유, 내면화 그리고 근대주의. 『역사와 현실』, 96, 109-139.
- 오항녕. 2016a.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 역사의 향유와 모독 사이. 『역사와 현실』, 100, 91-128.
- 오항녕. 2016b. 『호모 히스토리쿠스』. 개마고원.
- 우카이 사토시. 1999. 르낭의 망각 또는 ‘내셔널’과 ‘히스토리’의 관계. 이규수 옮김. 『내셔널히스토리를 넘어서』, 297-317. 삼인.
- 유지기(劉知幾). 710. 『史通』. (오항녕 역. 2012. 『사통(史通)』. 역사비평사).
- 이경래. 2010. 미국의 비밀기록관리체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 『기록학연구』, 23, 257-297.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 이상민. 2000. 전자기록물의 관리원칙 :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13, 119-144.
- 이상민. 2002. 역사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기록학연구』, 6, 201-215.
- 이성임. 2014. 『溪巖日錄:1603~1641』에 대한 자료적 검토. 『한국사학보』, 57, 197-226.
- 이승억. 2013.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이승억. 2014.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185-211.
- 이영남. 2014. 기록의 역운－포스트1999를 전망하며. 『기록학연구』, 39, 229-280.
- 이유진, 윤은하. 2017. 기록도 역사기록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규칙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30.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전명혁. 2005. 기록과 역사—역사서술에서 기록물과 사료, 역사이론의 관계. 『기록학연구』, 11, 122-142.
- 정성미. 2016.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현황과 기록학적 분석 시론. 『기록학연구』, 50, 231-271.
- 조민지. 2011. 기록의 재현과 기록기술(archival description)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조은성. 2013.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7, 75-142.
- 천권주, 김효민. 2010. 기록물 보존가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군 특수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45-86.
- 천호준. 2012.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기록학적 평가. 『기록학연구』, 31, 95-138.
- 최승희. 1981. 『韓國古文書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지식산업사 재발행.
-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 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147-177.
- 최재희. 2011. 국내의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 『한국기록학회지』, 11(1), 7-22.
- 최재희. 2014.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153-175.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 『기록학연구』, 30, 3-55.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역사비평사.
- 한국기록학회 편집부. 2002. 사료학 및 고문서관리론. 『기록학연구』, 5, 262-273.
- Assmann, A. 1999. *Erinnerungsräume*, (채연수, 변학수 옮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 Barton, K. & Levstik, L. 2004,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 Routledge. (김진아 옮김. 2017. 『역사는 왜 가르쳐야 하는가』. 역사비평사).
- Bernheim, Ernst. 1907. Einleitung in die Geschichtswissenschaft. (박광순 옮김. 1988. 『역사학입문』. 범우사).
- Carr, Edward. 1997. *What is history?* (김택현 옮김. 2001.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 Duranti, Luciana. 1995,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The Concepts and Their Implication", *Archivaria*, 39, SAA.
- Duranti, Luciana. 1998, *Diplomatics: New Uses for an Old Science*, The Scarecrow Press.
- Evans, Richard. 1997. *In Defense of History*. (이영석 옮김. 1999. 『역사학을 위한 변론』. 소나무).

- Hartman, Josef. 2004. *Urkunden*. Beck, F. & Henning, E. 편. 『*Die archivalischen Quellen*』. BÖHLAU.
- Jenkinson, Hilary. 1937.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이상민, 오향녕 역. 『기록 관리편람』. 2003.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 Jimerson, Randall C. 편. 2000, *American Archival Studies: Readings in Theory and Practice*, SAA.
- Jimerson, Randall C.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이상민 역.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Lee, Peter, edit. 1993.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Vol.1)*. Columbia University Press.
- Ricoer, Paul. 1983. *Temps et re'cit: Intrigue et re'cit historique*. (김한식, 이경래 옮김. 『시간과 이야기』1-줄거리와 역사 이야기』. 문학과지성사. 1999).